

#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1. 자치행정국

日 時：2007年 11月 14日 (水) 午前 10時

場 所：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9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자치행정국

○委員長 吳榮世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과 금년도 추진실적 또 내년도 방향 및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생활자치 실현과 일로써 평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등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너무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또 미흡한 부분과 궁금점을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그동안 꾸준히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입찰에 참여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

가뜩이나 또 시청사 관리조차 외지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공동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 이유는 물론 규모가 되지 않으니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방법을 만들더라도 우리 시청사를 우리가 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꼭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원 이상이면 지역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요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법적 요인을 저희가 먼것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떤 지역제한이라든지 도급비율 이런 것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물론 3억원 이상 법으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좀더 많이 거기에 배정시킬 수 있게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그것이 전국을 풀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저희 욕심 같아서야 많이 비율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법 개정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입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1억원 이상과 1억원 미만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체납업체들이 1억원 미납은 체납업체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일간신문에서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약 6,000만원 정도 세금을 체납한 업체가 1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해서, 거기는 자격제한 안 두니까, 결국은 또 하도급업체들한테 실비, 인력들 임금을 안 주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말씀하신 사항은 입찰할 적에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 대금을 지출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라든지 전체적으로 납세완납증명을 떼어와야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1억원 미만도 그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1억원 미만은 완납증을 안 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입찰할 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전부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郭泳敎 委員 금액에 관계없이 완납증명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대로 행복한 대전만들기 위한 행정·재정적 뒷받침의 중점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자기부상열차에 이어서 로봇랜드마저 고배를 마셨는데, 시청 기간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로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민들이 대전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행복한 대전이 아니라 불행한 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정의 전반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가 아닌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중앙정부 정보의 입수체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이 대전시정을 믿고 협조를 하고 따르고 그러는 건데 매번 이렇게 하나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민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집행부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선 4기 1년 반째서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솔직히 이런 국책사업은 다 뺏기고 또 경제마저도 수치상으로 보면 계속 쇠락해 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대전시민이 볼 때는 민선 제4기 들어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기관이든 의회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론으로 가서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지금 자주재원 확충이 큰 문제, 절실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방세가 처음으로 282억원, 3%가 감소를 했다, 대전시가 그만큼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부동산 거래 줄어듦과 경기침체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퇴보가 됐다는 절대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은 물론 여기서 막연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체납세금, 미납된 세금을 더 많이 건어들여야 되는데 실적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체납액도 비슷하고 징수실적도 비슷하고 뭔가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07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820억원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 820억원 또 세외수입이 별도로 한 350억원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않으니까,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못 건어들이는 세금을 더 많이 건어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 보면 별도현황도 보면 작년이랑 대동소이합니다.

결손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것인데 이것이 뭐가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시효완성이 되도록 하고 행방불명도 그동안에, 행방불명 전에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경매나 공매 시 무배당한 것도 그것도 무엇인가 서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배당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주재정 확충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유야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어떤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토지거래가 또 건축물거래, 아파트거래가 대략 15%에서 한 30여%까지 급감하다 보니까 거래세가 감소가 돼서 지금 세입이 줄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정부에서 중부세를 가지고 부동산 교부세를 금년도 250억원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거래세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위 보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의 어떤 현안사업이라든지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원확충이 절실합니다.

물론 그런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위원님

께서도 걱정해 주신 체납액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세정부서에서 또는 각 세수입 관련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대략 9월 말 현재로 374억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금징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74억원을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서 한 136억원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29억원 또 조세채권 확보를 해서 한 93억원 또 현장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117억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374억원 정도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가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 대비해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는 물론 체납액 정리부분까지 어떠한 방법적으로 저희가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정립되면 한번 위원님께도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 그랬고 무엇인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또 번호판 인식기를 구입하고 했지만 그러나 크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인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인지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이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매년 되풀이된다고 하면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절실한 이 방안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무과 직원의 숫자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인력이 만족하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립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 계획에다 담아보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인센티브 포상금 효과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어느 정도 효과가 이상으로 배가가 돼야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투입하는 액수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게까지 진단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세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6급 이하는 전부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명감도 강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체납액을 클리어 하게 만족하게 정리 못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연관된 문제인데 미수납액 현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140쪽인데

하천사용료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홍명상가의 경우에는 시에서 아직 매입하는 문제가 정리가 안 됐고요.

중앙데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계약금만 나가고 잔금지급 시기에 가서 그것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더라고요, 하천사업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촉구를 했는데 좌우 시간 잔금지급 시기까지는 하천사용료를 받아내겠다.

○吳丁燮 委員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여기서 보상금 줄 때 완전히 상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이 세무부서하고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우선 얘기하고 문서도 보냈어요, 동구청에도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를 전체적인 저희가 중앙데파트 측에 비용을 줄 적에, 매입 예산을 집행할 적에 그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계약서상에 철저히 해놓고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칫 민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지급된 다음에 다시 하천사용료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채권관리현황 중에서 보면 토지정보과 변상금채권 임차보전금 변상금 6,9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대흥동 시청사에 있을 적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 뒤에 있던 경암빌딩, 옛날 중도일보 사옥이지요.

거기에 일부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시에서 회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못 했는데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일을 잘못했다 이래 가지고 변상책임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작년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1년이 됐는데 진행된 사항이 본 위원은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세요?

저희가 관련공무원이 6명이에요.

6명인데 국장에서부터 실무자까지 이래서 개인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 징수를 하고 그리고 일부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은 공무원들끼리 사실상 안 된 일입니다만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 이 상태로 되어 있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일시에 많은 돈을 내기 어려워서 할부로 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공무원들은 어쨌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먼것번에 소도 제기했었는데 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사실 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럼 계속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은 완납을 했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할부로 분납을 하고 있고 두 분은 퇴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기간을 달라고 해서 기간을 좀 췌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도 계속 문제지만 건설관리본부 중도산업(주)에 사무실임차보증금 5억 6,700만원도,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현실적으로 그것은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낼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글썄, 본 위원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떼이는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고하셨는데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저기 떼이는 돈은 많고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전문적인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야될 테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세수 확충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더군다나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800억원씩 체납금이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형평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뭐냐, 세금 안 내고 버티고 말이야, 여기 저기 행방불명되

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내도 된다, 많은 부분이 결손처리가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 세수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 변명 같이 들립니다만 이것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매년 다소간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원을 부과했으면 100원이 다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다소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각 시·도별 체납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그래도 하위에서 체납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체납률로 보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뒀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동료이신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발표된 로봇랜드 유치가 실패해서 정말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또 추진하고 있던 대전시 공무원들도 굉장히 허탈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에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패한 원인을 단지 지역소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변명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국책사업이 계속 실패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볼 적에는 공무원의 능력이 절실하게 더 요구되고 또 책임감 이런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요새 사실 공직사회의 어떤 화두라고 그러면 무능 공무원 퇴출 문제가 굉장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이런 행정체계에 대한 어떠한 일대 변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능 공무원 퇴출문제를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기획중인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광역도 지금 8군데가 되고 기초도 이미 31군데 정도가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대전시 박성호 시장께서도 지난 3월 이후부터, 우리도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그런 인사행정을 단행하겠다는 그래서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는 공무원 퇴출에 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실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각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소위 공무원 퇴출이라는 용어를 써서 연초에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시행을 한 데도 있고 또 대개의 경우에는 사실상 던져만 놓고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대세가 연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용어선택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것은 용어 선택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어떤 공무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자, 일하는 조직으로 끌고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사실상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느 광역시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할당제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어떤 혁신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무성적평정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적에 어떤 당해 계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해서 두 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 또 실질적으로 보면 직무에 관한 어떤 몰입도랄까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것은 각 부서장이 어떤 소위 적어내도록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묶어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다시 평가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어떤 예를 들어서 바로 직무에 복귀시킨다든지 하고 만일에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각 시·도에서 했던, 추진단이라든지 현장행정에 배치를 해서 일정기간 해서 거기서 잘 되면 또 복귀를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놓을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현재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고 외부에다 내놓을 만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사실은 이것이 용어선택도 말씀을 국장께서 하셨지만 ‘퇴출’하면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강화하는 데에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확실하게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물어왔냐 하면 이것이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대전시에 내년 1월부터 공무원 퇴출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보도가 났어요.

그것 혹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일간지예요?

○李貞姬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내년 1월부터요?

○李貞姬 委員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이 나서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아는 사람이, 글썄 그 문제를,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인사의 어떤 제도가 만약에 시행될 거라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도 이것이 정보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몇 사람 물어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해 보는 것인데 그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이.

공무원의 퇴출대상 선별기준이라든가 특별관리 프로그램 등을 최근 확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그러면 이런 자료가 외부에서,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으로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공무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출이라는 용어를 할 적에 사실상 인사부서에서 손을 안 댔어요, 인사부서에서 안 대고 혁신 쪽에서 일단은 댔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혁신, 이것을 놓고서 즉 혁신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거기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공무원 인사부서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거기서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저희가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일하는 조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역량강화로 이렇게 저희는 몰고 갔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물론 직원간 합의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합의가 돼야 되고 또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안 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각 시·도의 어떤 동향도 파악해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조류라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확정해서 했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확정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인사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구상하면서 그 부분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한 파트를 하면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이렇게 구상하는 단계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제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것은 이해가 됐고 지금 대전시가 어저께 기획관리실의 감사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대전시가 지금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감안해 볼 적에 공직사회가 이제는 좀더 긴장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인사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공무원의 기강문제라든가 조직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에는 또 보니까 기획예산처 중앙위원회에 따르니까 공무원 성과급 같은 것도 내년엔 능력에 따라서 배로 올리겠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러한 문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우대해 줘서 조직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 자체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연공서열로 지급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서로 공직사회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병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인사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효율적으로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성과급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도상의 미비도 있고요, 지금 일중심, 성과중심으로 가서 진짜 성과를 낸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는 원론적인 얘기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성과급을 주면서 하위직 직원들이 등급간 격차가 너무 심하다 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의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좀 폭을 좁혀달라, 단계를

여러 개로 하더라도 폭을 좁혀달라 이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그런 것을 격차를 축소해달라 이렇게 건의한 부분도 있고, 이게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겠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자꾸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중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지금 지자체시대고 그것은 중앙에다 책임을 떠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성과급제도라는 것이 원 취지에 맞게 이러든지, 왜 이런 얘기를 하나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보상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연공서열이나 이런 대로 관행적으로 이것이 지급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창의력 있게, 뭐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되는데, 순위대로 연공서열대로 만약에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직 내의 어떠한 혁신을 일으키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연공서열에 의해서 성과급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성과급을 주다보면 연공도 감안될 수가 있고 또 일을 하는 사람도 감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딱 잘라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늘 실·국장들한테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할 적에 물론 그것은 승진과 바로 결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연공이 있는 사람이 승진돼야 되는 것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특별히 성과상여금을 타야 될 사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거기 근무실적이라는 평정요소가 있어요 근무실적, 평정 중에도 실적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실적요소에 점수를 많이 줘라,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런 승진 이런 것을 떠나서 상여금을 받을 적에는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평정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 진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어째 이렇게 평가가 시원찮은가?’ 그러면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의신청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위에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대전시가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직무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설문의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아시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거기서 나타난 가장 부정적인 설문의 내용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공무원 직무만족도에 대해서는 먼것번에 조신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비예산사업으로 과제를 줘서 한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전체 시 직원들의 한 17% 정도가 참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참여 정도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결과를 제가 존중한다고 봤을 적에 지금 낮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낮게 나타난 부분이 인사, 교육훈련 또 직무관련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가장 여기서 불만족으로 나타난 부분이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가 다 다른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이 넘는 3.5 이상의 평점이 나왔는데 인사에 관한 만족도라든가, 인사에 대한 만족도 전반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인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인사운영의 합리성이라든가 근무성적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전시가 하고 있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이게 공정성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한 것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수치를 그래프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것대로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보니까 별로 부정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한 게 여기 우리가 보통시점으로 볼 적에 이게 지금 여기서 보이시지요?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6.5%였지만 보통이다가 44.5%, 그렇지 않다가 27.4%입니다.

그러면 한 35.5% 정도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정성과 투명성 단계도 별로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는 편이 훨씬 중간시점으로 볼적에 이쪽 라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근무성적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도 이것을 기점으로 했을 적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에서 우리가 이번의 용역결과를 보시고서 국장께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어디다 두시는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만족도조사 결과 인사 관련된 것이 대략 35% 내외가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 것이 많은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또는 합리성, 근무성적평정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인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면에서는 저희가 연초에 우리 직원들이 조직원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인사방침이라든지 또 어떤 임용기준 또 인사교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초에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직원한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한테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공표를 해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전에 승진임용기준 이런 것도 저희가 임용기준하고 인원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고 또 전보의 경우에도 저희가 전보규정선정위원회 이런 것은 하위직, 직급별로 다 참여시켜서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인사에 대해서 뭐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나 어떤 합리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만일에 내가 기대를 했는데 모든 것이 잘 안 된다 하면 또 답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제약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원들이 어차피 이런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노조라든지 이런 주로 하위직을 대상으로 수시 대화도 가지면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중에서도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타당성 문제 그런 게 또 여기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자가 우리가 다면평가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관적이 아닌 어떠한 인사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관리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직원이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일단 자기 신분에 관한 것이 확고하게 이게 공정성이다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에 대한 조직원의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근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줘라”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또 연공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평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충은 있어요.

이것을 적절하게 연공도 감안해가면서 일하는 사람을 우대해 주는 이런 것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사실 평정할 때마다 그 평정하는 사람도 그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직원들 다 놓고서 평정할 때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가 위원회를, 근무평정위원회를 해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이렇게 해서 평정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실제 ‘아,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도 어째 점수가 좀 시원찮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주는 제도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국에서 근무평정을 국의 주무과에서 소위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그러니까 국에 과가 다섯이면 다른 과에서 불만을 해요 주무과가 다 먹는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그러면 순환제를 해라, 그러면 첫 번째는 주무과에서 두 번째는 차석과에서 세 번째는 또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어떤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만요인이 있으면 제도를 자꾸 이렇게 바꿔서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도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 된다면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인식을 주무국장께서 하고 계시니까 바람직한 공정한 인사제도가 되리라고 믿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나타난 것이 남성 공직자에 비해서 여성 공직자가 부정적으로 인사에 대한 모든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에서 여성들이 더 남성보다 인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박성호 시장께서도 간부공무원, 간부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소위 5급 이상을 얘기하는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간부공무원을 몇 퍼센트까지 임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과거에는 여성공무원들의 수가 미미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저희가 공무원임용시험을 봐도 반 이상이 여성공무원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거의 한 70%가 여성공무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반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과별로 소위 핵심 과라면 어폐가 있습니까 다만 예산, 감사, 인사 이런 데 위주로 전부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라고 했어요.

배치하라고 해서 거의 다 배치가 됐고 지금 목표는 각 과별로 1담당, 담당이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을 여성공무원으로 하나씩 배치를 하겠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것은 승진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또는 여건이 아직 불비해서 그런 것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사할 때만이라도 몇 자리가 당해직급에서 한 직급을 올라가는 승진요인이 있다 그러면 조금 벗어나도 그 배수 내에 여성공무원이 있으면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발탁을 해주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성공무원이 최소한도 손해는 가지 않는 인사정책을 앞으로 계속 펼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대전시에서 계속 여성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밖으로 표현할 때는 상위직 공무원으로 우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사실은 하지요.

그런데 목표액도 한 20% 정도 잡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 항상 대전시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여성을 우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량, 목표량이라면 조금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여성에 대한 우대책이 그게 여성들이 볼 적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꾸준히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이러한 인사문제는 우리가 좀 공정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대전시가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위기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려면 우리가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정희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기왕에 조직에 활력을 넣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만한 인사정책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좀 메워가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다른 위원님 하고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간단히 할까요?

○委員長 吳榮世 예, 간단하게.

○吳丁燮 委員 자료 103쪽에 보면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게 수치화를 ‘70.6’ 2005년도는, 2006년도는 ‘66점’ 점수라고 봐야지요 이것은?

103쪽.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비율로 본.

○吳丁燮 委員 수치에 대한 기준설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준이 450명을 직접 설문조사했다는 조사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량화를 어떻게

했는지, 점수를 어떻게 배점을 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2005년도에는 70.6점을 맞았는데 2006년도에는 66점을 맞았다.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그 밑에 만족도 변화추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응대친절도는 2005년도에 75.4에서 2006년도에는 60.5로 14.9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저희가 민원행정 만족도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것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103쪽 보시는 이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거의 한 4% 정도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만족도를 설문한 대상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의 경우에는 구청방문민원까지 포함했고 2006년도에는 시청방문민원만 하다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의 5개 구에 걸쳐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시로 온 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조금 불편했다 이렇게 소위 측정하는 결과가 하향돼서 나온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공무원의 응대친절도가 좀 낮게 나타난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도 업무보고에서 일부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민원 공무원들, 비단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다 민원을 상대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자성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수치화를 해놓으면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얼핏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자료다,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자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도 꼭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설문조사에 의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민원부분만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별도 시책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국비공모 지원상황, 단체별,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 즉 해서 나온 109쪽에 보면 지원기준, 절차 이게 사실은 중요한 사항인데, 심사기준, 선정, 여기 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5명, 109쪽이요.

시민운동가가 공익사업선정위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것은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1명, 회계사가 1명, 대학교수가 3명, 연구원이 1명, 전 공무원이 1명, 시민운동가가 8명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것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吳丁燮 委員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운동가가 공익사업 돈 배분하는데 8명씩이나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확보가 되겠느냐 그것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해서 10명 내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시민단체, 시민 소위 운동가라는 분들이 여덟 분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계속해서 사실상 이렇게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있게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맥락으로 시민단체 소위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吳丁燮 委員 문제는 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대전여민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부 시민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15명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이분들이 위원들이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있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배제가 됐습니다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번 공익사업선정위원을 구성할 때 한번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구별로 공정하게 또 덕망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지, 이게 지금 아주 시민운동단체들이 그렇게 많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지원금을 이 사

람들이 앉아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한두 명이 들어간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5명 중에 과반수예요.

그리고 지원받는 단체들을 보세요, 거의가 시민단체 대전 YMCA, 대전사랑시민 협의회 뭐 해서 전부 시민단체입니다 이게, 시민단체를 시민단체가 심의해서 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덕망 있는 분들, 공정한 분들 편파적이지 않게 재조정하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내년도 할 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콜센터 운영, 115쪽이네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권이 25%, 차량등록이 60%, 이것이 85%예요, 상담실적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과 차량등록을 위해서 존재하는 콜센터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대개 그동안에 네 개 분야를 해서 상담하다 보니까 차량등록이나 이런 데로 편중돼서 사실상 콜이 됐어요, 여권하고 해서 85% 됐는데 글썄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으면 골고루 많이 있어야 바람직하겠습시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많은 것이, 문의할 사항이 많은 것이 차량등록하고 여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부로 편중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상대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여권부서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하면 불친절하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저희가 콜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콜 한 숫자만큼 이것이 안 됐으면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가 갔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콜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알려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의 업무집중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차량등록이나 여권에 대해서 콜센터를 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수치상입니다만 대개 98% 정도가 자기네 물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만족한 답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설치목적에 보면 뭔가 전화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집중도 향상 여러 내용이 있는데 너무 여권하고 차량등록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민원 콜센터 운영 방안의 개선점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분야를, 어떤 상담 분야를 추가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화두로 던진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분야를 딱 집어서 다시 새로운 분야를 넣어도 큰 성과가 없지 않을까, 현재로써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진짜 시민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가 한번 수요를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마지막으로 118쪽에 보면 정보공개처리 실적이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줘야 되고 그런데 비공개 사유 내용을 보면 물론 비공개 비밀사항이 될 수도 있고 재판관련 정보사항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사생활침해일 수도 있고, 그것은 좋아요.

특정인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이익이다, 이것은 영업상 기밀이다, 이것은 법령상 기밀이다,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까,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보면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열거조항이 있습니다.

열거조항이 있는데 개중에는 열거조항이 있습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아! 공개해 달라.” 이렇게 다시 이의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적에는 저희가 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의를 해서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공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이런 이유로 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통계수치입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걸끄러운 자료는 이러한 명목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봐서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이해를 해주실 것이 공무원들만 앉아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 대개가 그런 분들이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됩니다만 대개 법을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법 정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46건이 청구가 돼서 46건이 비공개 건수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정말로 궁금해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는데 46건이라는 것은 비공개를 했고 149건은 취하됐고 또 문제는 ‘자료 부존재’ 해서 28건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된 사항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자료 부존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운수업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있어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관련 부서에 그런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교통관련 부서에 없고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부존재라는 것은 그 관련,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관리하는 자료를 우리보고 공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판단기준,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이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시킬 있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120 콜센터의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니까 그동안에 상담실적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루에 650~700건 통화로 늘어났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용실적의 양적 확대만 가지고는 성과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 콜센터가 사실은 원래의 목적을 보면 지금 4개 분야, 여권업무라든가 차량등록 문제라든가 대중교통, 상수도 이런 데에서 너무 과다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로 인해서 행정업무에 집중화를 꾀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설립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오전에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상담분야가 현재 다섯 개가 있습니다만 일부 차량등록이라든지 여권민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설치목적이 어떤 차량등록이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전화가 집중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설치해서 업무 집중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탁 뭘 분석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지금 콜센터로 차량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등록사업소의 전화민원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서는 많이 저쪽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집중도가 늘어났다 저희는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상수도 취급하는 그런 데서 확인한 바로는 일반인들이 전화를, 물론 숫자적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줄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들도 그렇고 이것 사실 돌림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 적에 단순한 업무는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업무는 다 그냥 취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나 또 상수도본부나 이런 데에 전화를 걸 적에는 그것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까다로운 문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구체적으로.

○李貞姬 委員 예,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다 선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다 전화를 하다보면 더 돌림현상 이런 것 때문에 더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들은 왜 이렇게 옛날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너무 모르고 다시 돌림현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그쪽에서도 사실은 체감하기로는 그 공무원들은, 거기서 취급하는 사람들은 120 콜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효율성을 갖고 있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담원들이 즉시 답변하는 것이 89% 정도 되고 그리고 담당자로 전환해 주는 것이 11%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상담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상담원들이 즉시 무슨 문의사항이 되든지 즉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소관부서로 일부 한 11%

정도 연결해서 처리해 준다는지 아니면 나중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답변해주는 소위 콜백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담원들이 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갖추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상담분야도 시민들이,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89%하고 11%라는 퍼센티지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주 무거운 전화상담 같은 것은 매뉴얼을 개발해서 상담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해도 감당 못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도 상담원들이 기술적인 문제까지 답변하기는 어려울 테고 실질적으로 평이한 질문을 할 적에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저희가 설립목적에 맞게,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콜센터 역할이 114 기능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가까지도 확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KT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 시설구축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운영부분에서만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운영부분에서 재계약 하면 2년 됐으니까 한 6개월 전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겠다는 경쟁은 없었습니까?

한 군데만 들어온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약정서인가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다시 수탁을 받고자 할 때는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따져보니까 어제가 6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KT에서 자기네 계획서를 냈습니다, 다시 수탁을 받고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KT를 놓고서 일단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일에 만에 하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면 다시 수탁을 희망하는 데를 신청을 받는다는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KT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운영관리 그러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원 계약했던 금액하고 다시 추가발생해서 증가되는 요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지요.

○李貞姬 委員 검토 못한 부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첨부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李貞姬 委員 우리가 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114 기능에 머물지 말고 좀더 확대돼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새터민에 관한 것이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지 않아도 여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또 먼것번에 협의회도 구성해서 8월달에 첫 번째 위촉해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사실상 크게 변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시에서 새터민위원회라든지 새터민 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한 1,20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도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회의를 해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논의를 해 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협의회가 기이 구성됐고 또 우리가 자유총연맹에서 새터민자립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구청에서 기이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조기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 공무원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가 있었고 몇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 방안은 나와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인사과정 일부를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

에 위탁 운영을 하는 방안도 해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다 또 직무 스트레스 만족도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못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다방면으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직원들의 어떤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뭔지 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오전에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만족도 조사가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사의 문제점, 조사해본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선 직무 만족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자료 59쪽에 보면 '직장동호인 클럽현황 및 지원실적, 지원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든 또는 업무보고 시간에 가끔 제안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을 만족시키려면 먼저 우리 직원이 만족해야 된다, 공무원이 만족하지 않으면 시민만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을 만족할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든지 또는 직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동호회 회원들에게 지원금액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올라갔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것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동호회가 27개 정도 해서 동호회 나름대로는 활발히 동호회 활동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갈수록 동호회는 느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해서 하는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호회별로 1년에 몇십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시청 동호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무슨 대회를 참가한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돼요.

하다 못해 무슨 운동복이라도 해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호회뿐만 아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공무원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노조랑 단체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문제가 조직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확보에 저

회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글썄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매년 같은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실정이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다른 만족도는 높은데 배낭여행 부분은 또 만족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많이 가보라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 권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썄 이것이 이유를 그렇게 달지 않고 만족도가 배낭여행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다 보내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다 못 가서 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봤더니 큰 의미가 없더라 이런 건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못 가서가 아니라…….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해서 가고 또 본인들이 팀을 짜서 가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직무만족도 조사할 때 불만족하면 왜 불만족한지 이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외 배낭여행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잦다 와 보니 별 것 아니더라는 인식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안 가본 사람들이 “나는 못 갔으니까 이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뒤에도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요?

배낭여행하고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 공무원 휴양시설 35구좌인가 했는데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성수기가 됐든 비수기가 됐든 본인이 쓰고자 할 때 혜택이 못 가기 때문에 소위 만족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도 있지요.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도 줘야 되고 또 기왕에 간다면 질 높은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도 높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후생복지사업 일몰제를 도입해서 그 일몰제를 한 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더 투입을 시키면 좋다는 그런 대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례 제정이요?

○趙信衡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썽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검토 한번 해보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2002년도에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죽 생각해왔던 것인데 공무원들을 위한 날이 없어요.

날은 다 있는데 경찰의 날 또 국군의 날, 소방의 날 다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한 것이 공무원의 날을 하나 정하자,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면 지방자치의 날이라도 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입법정책실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전 단계로써 대전시에서라도 공무원들 사실은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 때문에 다 욕먹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다 대부분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 여겨주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복지제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더 동기 부여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관련된 조례가 가능한 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1월이나 2월 그쯤에 제정하는 방안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한번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전문가 있으니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다음으로 143쪽에 지역업체를 아까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습시다만 사실은 지역업체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결국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계약할 때 지역업체에게 많은 부분을 할당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전시 말고 호남권이나 경상도권에서는 아주 단체장들이 지역업체 보호하려고 약간에 법에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지를 많이 해줘서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적지 않느냐, 너무 법만 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우선 2007년도 3/4분기 것만 좀 보겠습니다.

외지업체 수주액하고 지역업체 수주액이 있는데 금액별로 비율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시다만 외지업체 것만 보면 외지업체가 금액이 380억원인데 49건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나눠보니까 건당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건당 7억원 정도가 되고, 그런데 지역업체인데 500억원 대비 1,380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건당으로 보면?

또 용역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외지업체의 경우에는 120억원을 114건으로 나눠보니까 한 1억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업체는 그것보다 좀 상당히 적고, 물품구매용역의 경우에도 외지업체의 경우에는 건당 1,200만원 꼴로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업체 수주액을 보면 적은 수준이지요.

결국은 큰 건은 외지업체가 가져가고 적은 건만 지역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를 대우해 준다고 해서 총액범위에서 조금 높은지 몰라도 그리고 건수는 많은지 몰라도 실제 큰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 못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건수 면에서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95% 정도 되는데 금액에서 실제 용역사업의 경우가 보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2~43% 되는데 이 용역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3억원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용역이 이번에 이 통계잡힌 것 중에는 3억원 이상 용역비용이 많은 것이 다소 들어갔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금액수주 비율이 매우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3억원 이상이 되면 전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지역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은 단순히 노력이 아니라 다소 좀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이 지역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우리 청사 용역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응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 먼저 이번 말고 했던 업체도 시의 용역을 맡아서 한 큰 업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입찰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소업체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써서 입찰에 응하면 우리 시의 용역사업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지금 현재는 외지업체가 70%, 우리 대전시내 업체가 30% 이렇게 해서 시

청사 관리용역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업체가 좌우지간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 시의 용역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회계과장과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같은 마음이지요, 마음은 있지만 잘 안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그러나 입찰기술을 좀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청 용역한 것처럼 70%가 외지고 30%가 우리 지역으로 할 게 아니라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식적으로라도 컨소시엄을 맺을 때는 맺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더 많은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컨소시엄을 맺어와라, 그렇게 하면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지도까지도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법대로만 하고 또 알아서 가져오는 것만 받다 보면 지역업체 성장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지도 또는 기술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놓으면 그 기업들이 또 외지에 가서 열심히 용역도 따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르쳐서 우리 지역을 성장시키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5쪽이요.

여성공무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실과별, 사업소별로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여성공무원 수가 499명, 비율은 약 16% 정도가 되고, 자치구를 다 합쳐보니까 여성공무원 수가 1,413명에 38%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율로 보면 대전시에서는 여성공무원 수가 16%밖에 안 되고, 자치구에서는 적게는 약 37%에서 40%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대전시 공무원의 비율로 보면 여성에 대한 대우랄까요 아니면 여성의 할당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한 거의 50% 이렇게 시험에서나 공채에서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가 공무원들을 신규채용하면 시청에 발령을 안하고 일괄해서 저희가 구청별로 신규자를 몇 명씩 선발할 거냐 이런 계획을 받아서 선발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신규자들은 초임이 대개 동이나 구청 이렇게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시청에는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적고 구청에 현재 많은 입장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 사람들이 경력을 쌓아서 또 일정부분 시로 전입오면 시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직까지는 여성공무원 수가 3분의 1이 좀 안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한, 그렇지요 거의 3분의 1 정도, 한 28%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정도, 시에 들어올만한 여성공무원 수가 아직은 그렇게 포진이 안돼 있나요?

예를 들면 7급 이상, 6급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저희가 6급 이상 금년도에 8.4% 이렇게 임용 목표를 보고 있거든요 6급 이상이.

○趙信衡 委員 임용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임용?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시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승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6급 이상으로의 승진이지요.

○趙信衡 委員 승진, 승진해서 시에 들어올?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보유를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趙信衡 委員 여성공무원 수를?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는 2011년까지 20%를 하겠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 가서 저희가 조금 여성공무원을 최소한도 크게 우대는 못해주더라도 불이익은 없도록 해야만 이런 목표 달성하는데 다소나마 큰 제약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용목표를 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달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10년쯤 뒤면 오히려

려 그렇게 안 해도 남성공무원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될텐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남성공무원 여러분 힘내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청과 시청의 여성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의아해할 수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지요.

제가 마지막입니까?

다른 분 할 분 없어요.

○委員長 吳榮世 예, 정리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마무리하지요.

우선 하여튼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는 직무만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만드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두 달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치행정국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고생이 많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센터로 바뀌었지요?

그것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중앙계획에 따라서 9월부터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센터로 바꾸도록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바뀐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만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 현재 다 바뀌었나요 그렇게 주민센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조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부 구가 11월까지 바꾸는 것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알기로는 보도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봐서는 변경하는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돼 있고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확실하게 됐고요.

무슨 무슨 동이 무슨 무슨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됐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있어요 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좀 다른 기존에 바꾸는 주민센터나 이런 것과 조금 명칭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맞는 거예요 주민센터가 맞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주민센터가 맞고요.

무슨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 둔산1동사무소 하면 둔산1동주민센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그것은 명칭을 다른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주민문화센터라는 것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그런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문화센터로 바꾼다든지 또 다른 명칭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권고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 일선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인식이 잘 안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돼 있어요.

동사무소라는 게 부르기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고 시행초기 일부 구에서도 이게 이름만 바꾸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선의 소리가 중앙까지 전달은 됐지만 이미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은 다 해서 중앙에서부터 돈까지 지원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바꾸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서로 이번에 바꾸는 명칭이랑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는 자치단체장이 무슨 문화센터로 바꾼다든지 뭐 이것을 적당한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은 권고한 사항입니다 현재.

○委員長 吳榮世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잘 계몽이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광장, 이 앞에 있는 시민광장 특히 우리 의회동 앞에 여기 보면 주말에 결혼식이나 전통결혼식이나 궁중가례나 일반 결혼식을 이렇게, 지난번에는 궁중가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광장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턱이 높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청 무슨 1, 2층 로비라든지 이런 것은 휴일에는 좀 제한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남측 광장이나 이런 광장부분에 가서는

서로 쓰고자 하는, 공익적으로 쓰고자 하는 분들이 중복만 안 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글썽요, 그래서 우리 시민광장이 시민들이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시민광장이 외부에서 온 분들의 얘기는 정말 이렇게 광장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놨다.

시민광장이 정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통혼례라든지 또 궁중가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궁중가례 이런 것 등이 정말 시민에게 볼거리도 창조가 되고 또 문화가치를 계승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이 이 시민광장을 이용하는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침에 저희가 남측광장의 경우에 또 혹은 다른 부분도 24시간 무료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약요건은 뭐냐하면 우선은 쓰고자 하는 분이 어떤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영업성이 없어야 됩니다 영업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얼마든지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공성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보면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결혼식을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게끔 시설을 대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웨딩드레스나 이런 것 어디서 빌려오려면 조금 돈을 주고 빌려오는 것이지 전혀 어디서 얻어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민광장이 외국에는 이런 시청광장에서 결혼식을 많이 해요.

교외, 야외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식문화가 맨날 챗바퀴 돌듯이 30분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왕이면 토요일에는 이런 데를 어려운 분들 시민광장도 이용해서 결혼식도 하고 또 야외에서 궁중결혼식도 하고, 그때는 왕세자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많아요.

기마부대도 오고 연을 타고 와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궁중 이것도 틀고 하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 하는 점이 있고, 언론에 그동안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또 시민광장에서 이용하는 그런 영리성과 공공성이 적다고 그래서 제재를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어렵다면 의회에서 조례로도 좀 만들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회에서 뭐하느냐? 조례라도 해서 시민광장을 확실하게 이용하게끔 해달라”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적극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개방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혼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권장할 부분은 적극 개방을 하고, 다만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한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요 여기 와서 그렇게 장사할 사람들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그렇게 눈높이로 보지 마시고 어려운 가정이나 전통혼례 또 궁중가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도 보장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확인차원에서 드릴게요.

작년에 민선4기 출범 후에 5개 구청하고 인사교류 문제, 인사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협약사항대로 지켜집니까 지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오늘 마침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족하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구로 나가고 또 구에서 원하는 사람이 시로 전입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됩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대전시 통틀어서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소위 기술직이 되는데,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명부로 만들자, 시, 5개 구청 통합명부를 만들어서 그 명부를 가지고 어느 구청이 자리 있을 때마다 통합명부에서 승진을 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 통합명부 그 뜻은 좋은데 어느 구청에서 자리가 하나 났다 말입니다, 났는데 그 통합명부에 의해서 다른 구청에서 승진자가 온다 그러면 그 구청의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 협약사항을 보완을 하든가 개선을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이게 원칙 가지고는 다 동의를 하는데 어떤 각론에 들어가서 사람을 놓고 따질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말을 조금 협약서를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을 놓고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보면 올 같은 경우는 전입이 149명, 전출이 130명,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전입이 99명, 전출이 77명, 2005년에도 그렇고 전입이 209명, 전출이 180명, 항상 구에서 오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시로.

○吳丁燮 委員 본청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보니까 전입유형이 소양고사를 치르는 사람도 있고 전입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있고, 외국어 우수자 인사교류 이런 여러 분야로 나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좀 명확히 설정이 돼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건 기준은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양고사 우수자 뭐 외국어경시 우수자 이런 사람들은 전입시험을 면제하고 바로 전입을 받아들이고 그 여타 결원직위에 따라서 결원이 한 명 있을 적에는 배수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때는 시에 자리가 열 자리 나도 구에서 추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교류가 안 되고 시의 승진자를 그대로 시본청이나 사업소에 배치하는 이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결국은 전입이 많다보니까 문제는 일선 5개 구도 자치구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사권을 그렇게 쉽게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과연 좋은 인재를, 꼭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인사교류가 되겠느냐 하는 게 내용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여기서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라도 구청장이 그 사람은 안 된다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사교류라는 것이 우수한 인재가 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올 소지가 많지 않느냐 잘못 이게 운영이 되다보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언뜻 사실 그래요, 사람을 교류를 하자면 대개 좋은 사람은 안 주고 좀 시원찮다고 할까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해준단 말이지요, 어떻게 방출하는 입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이 생각하면 원만한 인사교류가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차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이게 원만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고 또 구청에서도 좋은 자원을 시로 보냈다가 다시 그 사람이 승진하면 다시 내려간다는지 이래야만 원만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상 강조를 하는데, 실제 일선 구청에서는 그런 불만도 있어요 개중에, 그전에 왜 일 잘하는 사람만 빼가고 시원찮은 사람 주느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인사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별로 할당을 해주거든요, 할당하면 구청장이 저희가 조건을 당해 계급에서 2년 이상자라든지 이렇게 배수로 추천해라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현재는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협약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이행이 안 된다면 그리고 각 구별로 인사교류의 숫자를 보면 형평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어느 구는 많고 어느 구는 좀 적고 그런 부분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런 면이 있어요.

저희가 5개 구가 있습니다만 구별로 어떤 직급을 놓고 볼 적에 전망을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 가면, 어느 구 가면 승진이 빠르다, 어느 구 가면 늦다 이런 것을 다들 직원들이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균형일 수는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도 일선 구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까, 하는 구가 있습니까, 신입직원들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행정직 말씀입니까?

○吳丁燮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행정직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채자원이 없을 경우에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일선 구에서 직접 채용, 공채시험을 해서 뽑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안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지는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일반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 뽑아서 배정을 해줍니다.

○吳丁燮 委員 대전시하고 5개 구청간의 인사교류협약이 좀 취지를 살려서 원활하게 인사교류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의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조정됨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오영세      광영교      김남욱      조신행  
오정섭      이정희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이희배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자치행정과장	임승룡
인력개발과장	한상섭
세정과장	민천규
회계계약과장	전필수
토지정보과장	강낙규
시민봉사실장	김연풍